

“대통령실도 통계청 발표 전 자료 총 111건 미리 받아”

산업활동 동향·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사전 제공받아

한병도 의원 “통계 사전 제공, 통상적 정책 협조 과정

文정부서 사전제공 받았다는 정부여당 주장은 정치공세”

대통령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자료 111건을 발표 전에 미리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올해 8월말까지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 부처 등에 600건이 넘는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통계 자료를 사전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계 조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12일 국내 모 언론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사전)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통계청 사전제공 현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8월 30일까지 통계청이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 자료는 총 602건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이 경



제금융비서관실과 교육비서관실 등 대통령실에 사전 제공한 통계는 총 111건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100건이 넘는 통계 자료를 통계청이 발표하기 전 미리 받아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산업활동동향 경제활동 인구조사,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사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건설업조사, 가계동향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온라인쇼핑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국민대차대

표,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등을 통계청으로부터 받았다.

같은 기간 통계청에 사전 제공을 가장 많이 요청한 기관은 기획재정부(117건)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도 99건의 자료 사전 제공을 요청했다. 국무조정실은 73건, 한국은행은 54건이었다. 경상남도 18건, 광주광역시 2건, 세종특별자치시 1건 등 지자체도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월 주택 통계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95회 이상 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은 그 근거 중 하나로 통계 작성·공표 과정에서 통계를 사전 제공토록 지시했다는 점을 들었다.

한병도 의원은 “통계 사전 제공은 통상적인 정책 협조 과정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사전제공을 받았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전형적인 가짜뉴스이자 정치공세”라고 말했다. /역산=이재훈 기자

새만금 현안 해결 ‘주도’

민주 안호영 의원, 국회 농해수위 국감서 농식품부·해수부에 예산 복원 강력 촉구



회 결정에도 포함된 ‘확정된 사항’이라며 “새만금 신항만 예산 삭감은 국민 기만이자, 힘들게 유치한 새만금신항만 투자까지 위협하는 배임행위”라고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 품질 저하, 사실상 훼손, 간접사업비 발생으로 인해 연간 5~60억 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해양수산부는 잼버리와 무관하게 추진되어 온 새만금 신항 개발을 계획대로 완료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내년 확정·시행될 예정인 ‘새만금호 증장기 수질관리방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어민·어업 보호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도 당부했다.

“해수유를 통한 새만금호 수질 개선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해수유를 확대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이 확정된 것”이라고 집중한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배수갑문 교차 개폐 방식이 외해역 어업과 어민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질의에서는 새만금사업이 시작된 1980년 대비 2022년 어획량이 40% 감소한 사실을 재조명했다. 해양수산부 차원에서 새만금사업이 전복 수산업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도내 수산업 복원 방안과 새만금 부지 내 수산업용지 확보 논리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끝으로 “새만금사업은 점라복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기회로 기능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으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주=전문선 기자



도의회 행자위·환복위 현장의정활동 1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 전북도에서 제출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용진 119안전센터 신축예정 부지를 찾아 현장의정활동을 가졌다. 2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제404회 임시회 기간 중인 12일 현장의정활동으로 전북광역지활센터를 방문했다.

도의회,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토론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년이 의원(전주)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전주)은 지난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세사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북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년이 의원은 “도내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시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전북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및 기본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권지웅 센터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올해 전세금 보증 사고액을 3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는 주택관리 지원, 소송 지원, 피해자 심리상담 등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상 임대인의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거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기 피해 규모와 수법이 워낙 다양해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피해자들에게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정토론에 나선 이병도 위원장은 “도내 전세피해 지원을 위해 세부 유형별 조사·분석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에서도 전라북도 주택임차인이 전세 피해를 입은 경우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지원 근거 마련 강동화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 통과

이른 나이부터 자신의 학업과 삶에 돌볼 새도 없이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홀로 감당하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도내 청소년 및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해당 상임위(환경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관련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동화 의원은 “그동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파악조차 어려웠던 도내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돌봄 부담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돌봄을 받을 나이에 가족 돌봄에 매여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이 앞으로는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미래를 꿈꾸며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의회,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 개최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김영태)는 지난 11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농업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영농활동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영농 지원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와 농업인단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주 의제는 농민공익수당 확대, 농촌인력문제 해소, 청년농업인 기증연령 상향, 기후위기 대응 예산 편성 등으로 청년농업인 기증연령을 39세에서 4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은 청년들의 의견도 함께 수렴한 후 추진을 검토하고,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등 농민수당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기후 위기대응을 위해 단순 피해보상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영태 위원장은 “활발한 영농 활동을 위해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농업예산 편성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새만금 예산 삭감, 신항 2026년 우선 개항에 차질”

민주 이원택 의원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와 새만금 책임으로 몰아 내던 새만금신항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돼 2026년 우선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시·부안군)은 해양수산

부 국감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수부가 내년도 새만금신항 관련 예산 1.677억원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1.239억(74%)을 삭감하고 438억 원(26%)만 반영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신항은 5만톤급 2선석 부두공사를 25년까지 마무리해, 2026년 우선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새만금 관련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신항 2026년 우선 개항에 차질을 빚게 생겼다”며, “윤석열 정부는 즉각 새만금신항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보다 나은 농어촌

축전주매일 창간

농지연금

지가 있다면

금 바로 가입해야 할

금이 있습니다

똑같은 노후 설계 친스~

<p>지원대상</p> <p>·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세 영농기간 합산)</p>	<p>대상농지</p> <p>· 공부상 지목이 전용·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이 이용되는 농지</p> <p>·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p>	<p>연금수령액</p> <p>· 농지가격과 연행에 따라 결정 (월 300만원 한도)</p> <p>·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p>	<p>가입혜택</p> <p>·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월 300만원 한도)</p> <p>· 담보농지는 지정 또는 연대소득 가능</p> <p>·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p>
--	--	--	--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KF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